

언론인이 본 석유산업의 경쟁



金炳秀
〈서울경제신문기자〉

석유 산업은 지난 30여년간 우리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는데 훌륭한 견인차역할을 해왔다. 성장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두차례 몰아친 석유위기를 어려웠지만 그럭저럭 넘긴데는 석유업계의 공로가 컸다는데 큰 이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과거에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그다지 곱지만은 않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앉아서 돈버는 장사”라는 등 구태의연한 표현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석유산업하면 언뜻 떠오르는 개념은 “독과점” “특혜기업” “관치산업” 등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기자가 석유산업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주제발표자리에 서게된 것도 이같은 부정적인식 타파가 석유산업이 처한 주요과제이기 때문인 듯하다. 앞으로 말하게될 내용은 극히 피상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아울러 기자개인이 느낀 것에 불과할 뿐이며 언론인 전체의 시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60년대이후 개발기간동안 우리경제가 보여준 가장 큰 특징은 시장기능을 존중하면서도 국가가 경제에 적극개입해왔다는 사실이다. 경제정책의 제일강령은 성장제일주의였으며 이는 철저하다고 할 만큼 정부주도형 원리에 의해 수행됐다. 이는 자본주의 정신에 크게 어긋나지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결과 민간기업의 투자도 사실상 정부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가 집중육성 할 전략산업을 설정하면 이 산업에는 세제·금융상 특별한 배려가 있어왔다. 물론 민간기업의 신규참여도 정부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와함께 가격정책은 성장을 위한 물가안정에 촛점을 맞춰왔다.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고시가격이 매겨졌다.

석유산업은 이같은 개발과정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산업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경제정책 상 나타난 특징이 곧 석유산업의 성장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각 부문에 걸쳐 자유화바람이 불면서 경제분야에서

도 자율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정부도 이제는 관치 경제의 틀을 벗고 민간자율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고시가격품목이 대부분 해제됐고 일부산업을 제외하면 투자조정을 정부가 나서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석유산업은 어떤가 '80년대초부터 자율화가 논의됐지만 아직도 관치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 신규 진입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존재하고 가격에서 기업의 이익까지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정부주도경제는 성장을 위한 효율성면에서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시장경제원리를 도와시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불균형을 낳게 된다. 민간기업의 창조적 혁신(이노베이션)을 통한 경쟁력 배양을 저해하고 독과점을 낳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독과점이란 그것이 견전한 경쟁의 소산이 아닌 이상 정부의 특혜서비스를 불러 일으킨다. 신규기업의 진입을 정부가 막아 줌으로써 생긴 독과점 기업에는 정부의 통제가 있겠지만 그만큼 보호되는 것으로도 볼수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석유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어찌면 이런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되는 산업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석유산업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고 이미지제고에 나름대로 힘을 기울였지만 아직 까지 부정적 시각이 불식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석유산업은 이러한 내적 문제외에도 심각한 대외적 도전을 받고 있다. 바로 국내시장에 대한 압력이다. 국민 경제의 마지막 보루하고 할 수 있는 자본시장과 서비스 시장마저 개방되고 있는 현실이고보면 석유산업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언제 매듭지어질지는 모르나 개방은 언제나는 시간만 남아있을 뿐이다. 더우기 세계에서 내노라는 메이저들이나 산유국들이 개방만되면 국내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국내석유업계로서는 이제껏 정부의 보호속에 안주하던데서 벗어나 체질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할때가 온 것이다.

이 같은 석유산업에 대한 기본인식 아래 앞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성장을 좀더 살펴보고 국내업계의 행태 및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지적한 다음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바를 말함으로써 끝을 맺으려 한다.

석유산업이란 유전개발에서 석유제품의 판매 및 서비스에 이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그러나 성장사와 정부 정책은 정유업계에 대한 것으로만 축소시켜 보려고 한

다. 우리나라의 정유산업은 제1차경제개발계획시행과 동시에 정부와 미국겔프사의 합작투자로 건설된 대한석유공사의 정유공장건설을 효시로 해 탄생했다. 알다시피 현재 유공의 전신이다. 67년에는 칼텍스가 국내에 진출, 럭키그룹과 합작으로 호남정유를 설립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유니온오일과 한국화약이 합작한 경인에너지가 68년에, 쌍용정유가 80년에 각각 설립됐다. 여기에 60년 윤활유생산업체로 출발했던 극동정유가 가세 5개기업으로 늘어났다.

64년 울산에서 일산 3만5천 배럴규모의 정제시설을 첫 가동한이래 30여년을 거치면서 시설규모는 일산 1백 19만배럴로 (허가기준) 증가했다. 년간 시장규모도 7조원에 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거대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평가는 내적성장내지 성숙은 이뤄내지 못했다는 게 보편적이다.

먼저 정유사간 경쟁이 국민경제에 보탬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들수 있다. 사실 이제까지 정유사간의 경쟁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이 아니었다. 분명 경쟁은 치열했지만 경쟁의 행태나 결과에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면들이 적잖게 나타났다.

예컨대 정유업계에서는 이미 흔한 말로 돼있는 이른바 "기금플레이"라는 것을 들어보자. 정유업에서 생산원가중 90%가량은 원유구입비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가장 큰 이익을 남기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은 원유를 최대한 싸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내정유업계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값싼 원유를 구입하기 위해 현업부서에서는 낮밤을 새는 일도 적지않음도 알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인력 정보내에서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수집에 나섰느냐에는 의문이 가는 것 또한 사실이다. 효율적인 원유구입을 위해 중요한 기법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물시장이용면에서 우리 업계는 아직 초동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무튼 이러한 지적도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지만 보다 큰 문제는 정유사들이 치중했던 "기금플레이"의 폐해였다. "기금플레이"란 국제원유시세보다는 석유사

업기금을 더내느냐 또는 석유사업기금에서 차액보상을 더 받느냐에 따라 원유를 구매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예를들어 모년모월의 경우, 어떤 유종의 국제원유값이 배럴당 16달러였는데 국내정유사들의 구매동향을 보니 이 기름을 살 경우 배럴당 2달러의 기금을 내야겠다는 판단이 섰다고 하자. 그런데 당시 세계시장의 일반적 유가전망은 기름값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다음달에 원유를 사면 원유대금은 적게 지불하지만 기금은 훨씬 더 많이 내야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원유를 사면 배럴당 14달러이면 되나 기금은 배럴당 5달러를 물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자. (실제로 이런일이 발생하는데는 복잡한 과정이 있겠지만 실례를 단순히 가정했다) 이때 A라는 정유사로서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정유사의 이익을 따르자면 원유값 16달러에 기금 2달러를 합해 배럴당 18달러만 지불하면 되는 이달을 구매시점으로 택해야하지만 국민경제를 생각하면 원유값이 싼 다음달(원유값 14달러에 기금 5달러)을 구매시점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그 정유사는 원유값이 비싼 시기에 원유를 구매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 결과 그 정유사는 비용면에서 배럴당 1달러를 견뎠지만 국민경제로 보면 그 배럴당 2달러를 손해본 셈이 되고 말았다. 정유사간의 경쟁이 오히려 경제에 주름살을 긋게 된다는 계산인데 이같은 현상은 실제로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결포전이 있었던 지난 90년 11월에는 이러한 “기금플레이”가 절정을 이루었다. 원유값이 가장 비쌀때 기름을 무더기로 들여왔던 것이다. 물론 구매시점과 국내통관시점과의 시차문제가 크게 작용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기본적 인식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내정유사들이 원유만 제대로 샀었어도 지난해 국제수지적 차액을 5억달러이상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의 진위여부를 떠나 정유업계로선 한번쯤 귀담아 들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함께 판매경쟁에서는 정상적인 가격및 품질경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주유소 쟁탈전, 이를위한 리베이트제공등 바람직하지 못한 경쟁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관행은 휘발유·등유등 일부 유종의 가격이 자유화된 후에도 이어져 아직까지 각회사 제품간

품질 및 가격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한가지를 더 지적한다면 국내정유업계가 그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에도 국내석유수요구조 변화에 적극대처한다는가 사회적요구에 부응하는 투자를 소홀히 한 점도 들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수요구조가 갈수록 경질화 저유황화되고 있음에도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을 갖춘 곳은 극동정유 한 곳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국내석유제품수요구조와 공급구조사이에 큰 왜곡이 생겨 석유제품수입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물론 남아도는 고유황벙커C유는 수출하고 있지만 수입하는 경질제품과의 가격차이상 무역수지적 자폭을 둘려 놓았을 뿐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데도 한발 뒤진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탈황시설의 경우는 국내대기 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애써 외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일부 비난이 있다. 참고로 이들 두시설의 용량을 정제시설과 비교한 시설고도화율을 보면 우리가 기껏 3%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54% 미국은 58%에 이르는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

국내정유업계의 경쟁양상이나 투자가 이처럼 파행이라면 파행이랄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른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앞서도 다소 언급한 바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석유산업에 대해 복잡하다고 할 만큼 개입해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석유정책 신규참여 ▲자기자본이익률 10% 범위내에서의 이익률사후정산·석유판매가격 최고액고시 ▲석유수급상 불완전요인이 있을 때 조정명령 발동 ▲유통부문의 주유소거리제 한동 통제 ▲석유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신고등으로 대별된다. 물론 이들 석유산업이 기간산업이며 방위산업으로서의 성격이 짙다는 측면에서 보호·육성을 위해, 한편으로는 석유제품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기 때문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두가지 이유에서 취해진 것이긴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의한 정부개입은 개발초기단계에서나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동안 이같은 정책기조가 국민생활안정에는 기여했는지 모르나 석유유통업의 경우 대외개방을 눈앞에 두고도 취약한 구조를 면치 못하게 하고 앞서 말한 폐단등을 초래한 원인이 됐다면 맷가는 지나쳤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 가운데 이익에 대한 개입은 기업의 투자이익과 건전한 경쟁유인을 떨어뜨린 최대원인으로 지목되고 있

다.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면 정부주도만으로는 경제를 꾸리기 어렵게 된다.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제는 관료조직의 특성상 여러가지 정책목표 중 한두가지, 그것도 주로 단기적목표에 맞춰지기 쉽다. 이러다보니 단기적목표에서는 성과를 거둘지 모르나 전체적 균형은 깨어지고 부문간에 무리가 생겨 성장을 위한 자생력을 잃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최근의 석유수요급증도 이러한 원리의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시가격체계가 분명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안정된 가격이란 목표를 추구하다보니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수요증가의 고삐를 잡을 수 없게되는 맷가를 치루게 됐고 그것이 안정이란 목적 이상으로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주게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석유산업 및 정부정책에 대해 문제점 중심으로 몇가지를 얘기했다. 무리하게 몰아친 느낌도 들지만 세미나가 뭔가 개선책을 찾기위한 것인만큼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 아울러 국내석유산업이 많은 문제점을 지녔으면서도 경제안정, 화학공업의 발전등에 크게 기여했음은 구체적으로 언급만 하지 않았을 뿐,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덧붙이고 싶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석유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이다. 석유업계는 현재 국내시장개방이란 큰 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 와

같이 정부보호속에서의 제한된 경쟁에 계속 안주하다가는 시장개방시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경쟁력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업계스스로가 잘알고 있겠지만 굳이 든다면 ▲유전개발 ▲시설고도화 ▲값싼 원유구매를 위한 정보채널 확보 및 인력개발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유통부문에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당장이라도 수성체비에 들어간다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여건 조성을 위해 풀어야 할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UR협상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고 본다. 정부는 이제 민간기업이 할수 없는 석유비축등에 힘쓰면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게임의 규칙만 정해주고 시시콜콜 개입해서는 곤란하다. 시장경제에서 자생력이란 “게임의 규칙”에 따라 기업이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면서 상호경쟁을 할 때만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지기 때문이다.

석유산업에 대한 부정적시각에 대해 약간만 더 언급하고 끝을 맺으려 한다. 사실 업계로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 있다. 이런점에서 다소 억울한 점이 적지않다. 외관만 보고 몰아부친 언론에도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무한경쟁시대가 오고 독과점시대가 사라지면 이 문제는 자연스레 없어질 것으로 본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개방파고를 넘길때 석유산업에 대한 국민의식도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용어해설

• 콘덴세이트 (Condensate)

콘덴세이트란 응축물이라는 뜻으로 보통지하에 기체상태로 있는 탄화수소를 지상으로 채취할 때 그것이 응축하여 액체상태로 된 기름(石油의 일종)을 콘덴세이트油, 또는 단순히 콘덴세이트라 부른다. 그리고 지하의 가스층 내에서 응축된 액체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를 콘덴세이트·가스田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콘덴세이트를 천연가스액 (NGL)이라고도 한다.

• 하류부문 (Down stream) 상류부문 (Up stream)

석유사업에서 탐사·시추·개발·원유생산까지를 상류부문이라 하고, 그 이후의 원유 수송·석유 정제·석유제품 판매의 단계들은 하류부문이라 한다.

上下流部門을 함께 경영하는 대자본 대규모회사도 있는데, 이 경우 上下수직 통합을 이룬 一貫操業會社라고 부른다. 이른바 국제석유자본의 대매이자들은 수직통합의 경영체제이다.